구걸하다 대박… 그래서 더 무섭다

경제포커스

이길성
산업부장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파업 위협이 한창일 때, 삼성전자 관계자는 "HBM(고대역폭 메모리) 후발 주자로서 '경쟁사 대비 헐값에 주겠다'며 구걸하듯 영업하고 다녔다. 그게 불과 6개월 전 일"이라고 했다. 반년 뒤 대호황을 예측조차 못한 채 빅테크들 앞에 고개를 숙여야 했을 만큼 반도체 사이클이 예측 불허라는 얘기다. 거꾸로 말하면, 지금의 역대급 반도체 호황도 6개월 뒤 어떤 이유로 신기루처럼 사라질지 모르는 공포스러운 현실을 보여준다. AI 붐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메모리 반도체의 민낯이기도 하다. 빅테크 수요에 종속된 채 호황기에는 잠시 칼자루를 쥐었다가 사이클이 꺾이면 가격 결정권을 내줘야 하는 K-반도체의 숙명이다.

그 뼈저림을 너무도 잘 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경영진은 초유의 대규모 이익 행진 와중에도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돌발 변수가 없나' 하는 근원적 불안감에 두 회사 수뇌부는 강박적으로 수요처와 해외 동향을 체크하고 각계 의견을 청취한다고 한다. 물론 시장에선 '수퍼 사이클 지속론'이 나온다. 천문학적 자금이 투입되고 감가상각 기간이 훨씬 긴 'AI 데이터센터'가 주도하는 이번 사이클은 과거 사이클과 달리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산업의 역사에서 '이번엔 다르다'는 낙관론만큼 위험한 신호도 없었다. 3년 전 7조7000억원 적자를 낸 SK하이닉스가 지난해 47조원 영업이익을 냈듯, 그 역(逆)이 불가능하다는 어떤 보장도 없다.

진짜 문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민이 두 기업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올해 5월 1~20일 기준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41.7%로 1년 전보다 19%포인트나 뛰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합계가 처음으로 코스피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두 회사가 내는 법인세가 국가 세수 규모를 좌우한다.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는 한국 경제를 위태롭게 한다. 두 회사가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동안 다른 제조업과 내수업종, 건설 분야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천문학적 영업이익이 우리 경제의 'K자형 양극화'를 숨기는 가림막이 되고 있다.

반년 뒤도 모르는 반도체 사이클 대규모 이익에도 기업은 살얼음판 분배 논란에 골든타임 허비하면 미래 위기 자초하는 결과 부를 것

지금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다음 반도체 다운턴(하강 국면)을 버텨낼 기초 체력을 비축하고 기술 격차를 벌려야 하는 골든타임이다. 하지만 오늘 눈앞에 보이는 호황의 숫자가 온갖 명분의 분배 청구서로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 내부의 성과급 파열음은 봉합됐지만, 정부와 여당 일각에선 반도체 대규모 이익을 마르지 않는 '화수분'으로 여기는 듯하다. 민주노총 출신 노동부 장관의 '초과이익 배분론'만이 아니다. 재계에선 "지방선거가 끝나면 각 기업이 대규모 지방투자 발표를 내놓을 것"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 그 투자가 기업 생존에 반드시 필요하냐는 질문은 무의미한 분위기다. 분기 수십조 영업이익을 올리는 기업이 권력 앞에서 "반년 뒤도 장담할 수 없다"며 우는 소리를 하기란 불가능하다.

밖으로는 경쟁의 강도와 지정학적 비용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파운드리 점유율은 TSMC 72%, 삼성 7%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메모리에선 중국 CXMT가 글로벌 D램 점유율 8%에 도달하며 한국이 일본을 밀어낸 방식 그대로 추격해 오고 있다. 미국의 첨단 장비 반입 봉쇄로 중국 내 삼성 시안·SK 우시 공장의 미래는 불투명하고, 트럼프발 관세 폭탄을 피하려면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지속해야 할 상황이다. 반도체 경영진의 살얼음판 걷기가 '쇼'나 기우(杞憂)로 치부되면 진짜 위기가 시작될 것이다.

이미도의 아라비안 舞飛 나이트 [12]

도끼는 잊어도 나무는 기억해

정치사상가 한나 아렌트의 핵심 통찰에 '무사유(無思惟·thoughtlessness)'와 '악의 평범성(the banality of evil)'이 있습니다. 권력에 맹종하는 자가 타인이 겪을 불행에 대해 사유하지 않고 저지르는 끔찍한 죄악의 속성입니다. '사유하지 않는 자의 악의 평범성'이 이란 영화 '그저 사고였을 뿐(It Was Just An Accident·사진)'의 주제입니다.

한밤중 찻길. 널브러진 개를 살피는 운전자. 의족으로 힘들게 운전한 남편 곁에서 만삭 아내가 거듭니다. "그저 사고였을 뿐, 개를 이곳에 보낸 건 신의 뜻일지도." 딸아이 반응이 당찹니다. "아빠가 죽였는데 그게 어떻게 신의 뜻이지?"

운전자 이름은 에크발. 다정한 남편이자 아빠로 비치는 그의 정체는 도끼. 숱한 나무를 내리찍은 전직 고문 기술자입니다. 반면 나무는 전체주의적 체제에 맞섰다가 고문당한 소시민입니다. 이들 몇 명이 에크발을 납치합니다. 목적은 사적 응징. 그가 "도끼란 자를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더 큰 문제는 눈이 가려진 채 놈에게 고문당했기에 도끼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것. 허사로 끝날 판에 에크발의 전화기가 울립니다. "엄마가 집에서 기절했어." 그의 딸과 대신 통화한 나무가 에크발 모르게 산모를 병원에 옮깁니다.

'도끼는 잊어도 나무는 기억한다(The axe forgets what the tree remembers).' 가해자는 자기 악행을 쉽게 잊을 수 있지만 상대의 트라우마는 평생 갈 수 있음을 일깨우는 은유입니다. 계속 부인하는 도끼에게 나무들이 알립니다. "아들이 태어났네." 그제야 그가 짐승처럼 울며 자백합니다. "시키니까 따랐을 뿐 먹고살려니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잘못했어. 아들을 보게 해줘." 그가 '기억하는 도끼'로 달라지길 바란 걸까요, 응징을 거두고 나무들이 떠납니다. 도끼를 아름드리 나무에 묶어둔 채. 2025년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 이란에선 상영 불가입니다.

작가·외화번역가

社 說

與 입법·행정·지방정부까지 장악, 권력 아닌 민생 집중을

민주당이 3일 열린 9회 지방선거에서 16개 시·도지사 중 14곳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4일 0시 30분 현재) 대승을 거뒀다. 민주당은 2024년 총선과 2025년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까지 전국 단위 선거에서 3연승을 하며, 입법부와 대통령, 그리고 지방 권력까지 장악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1년에 대한 평가의 성격도 있다. 국민의힘은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유권자들은 야당을 오히려 심판했다.

그러나 서울과 부산 등 접전 지역에서 야당 지지표가 많이 나온 사실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정권의 권력 남용에 대한 경고로 봐야 한다. 민주당은 각종 위헌적 법안들을 양산했고 사법부 압박으로 삼권분립을 위협했다. 선거를 앞두고는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게 부여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이같은 독주와 폭주에도 민주당이 대승한 것은 코스피 상승 등 정부 정책의 성과도 영향을 미쳤지만 무엇보다 야당의 이상한 행태와 지리멸렬 탓이 컸을 것이다. 지금 증시는 호황이지만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3고(高)가 현실화되면서 고통받는 기업과 서민이 적지 않다. 격차 해소를 내걸고 집권한 정부에서 격차가 더 커지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국정 운영은 그 반대로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당일까지 소셜미디어로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 같은 글을 올리며 '편 가르기' 중심에 섰다. 지방선거에 이겼다고 공소취소 특검법을 처리하거나 검찰에 공소 취소를 압박한다면 정치 갈등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3연승을 하며 입법·행정·지방 권력을 모두 장악했지만, 불과 2년 뒤 정권을 내줬다. 전례 없이 강력한 권력을 국민 통합과 민생이 아니라 적폐 청산, 소득 주도 성장, 탈원전, 이념적 부동산 정책에 남용해 민심 이반을 불렀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번 선거로 더 커진 권력을 공소취소 같은 곳에 남용할지, 국민을 통합하고 민생을 살리는 일에 집중할지에 따라 2년 뒤 총선 성적표가 달라질 것이다.

투표지 부족으로 투표 못 하다니, 정상 선거라 할 수 없다

3일 서울 강남권 등 여러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등의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은 선관위가 추가 인쇄한 투표용지가 도착할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일부 지역에선 마감 3시간이 지나서도 투표용지를 받지 못했고 상당수 유권자는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다고 한다. 방송사 출구조사가 나온 이후까지 투표가 진행되는 일이 벌어졌다. 야당은 "개표 중단"을 요구했다. 누구의 득표율이 방송되는 상황에서 투표가 계속된다는 것은 정상 선거라 할 수 없다.

선관위는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 탓에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졌다"고 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60%를 조금 넘는 투표율이 높다고 투표용지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설명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나. 모든 유권자가 투표한다는 생각을 하고 투표용지를 준비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아직 우리가 이런 수준밖에 안 되나. 이런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국민은 이를 선관위 발표가 아니라 카톡 등 SNS를 통해 먼저 알게 됐다. 선관위가 고의적으로 숨긴 것 아닌가.

이날 얼마나 많은 유권자가 투표를 포기했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투표용지가 없어 투표를 못 했다니 21세기 대한민국인가. 유권자 참정권은 단 한 명이라도 보장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국민의 참정권이 집단적으로 방해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 2021년 독일 베를린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과 용지 배부 오류 등이 벌어졌다. 당시 독일 헌법재판소는 선거 관리 부실을 이유로 전면 재선거를 명령했다. 정확한 선거 관리와 공정한 참정권 보장이 민주주의 선거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지난 대선 때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담아 옮기고 이미 기표한 용지를 유권자에게 나누어줬다. 각 당 참관인이 없는 상태에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기도 했다. 특혜 채용과 금품 비리가 만연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제는 투표용지 준비 부족이라는 상상 밖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지역은 대부분 야당 우세 지역이었다. 이는 우연인가. 만약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됐을 것으로 생각하나. 이런 선관위는 없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예견된 결과, 국민은 다 아는 이유 국힘 지도부는 아나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또 참패했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 이어 세 번 연속 전국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예견된 일이었다. 국힘은 계엄과 탄핵을 거치고도 제대로 된 반성과 혁신이 없었다. 당을 쇄신해 국민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했지만 그 반대로 했다. '윤 어게인'과 절연은커녕 '윤 어게인'이 당에서 활개를 쳤다. 계엄을 옹호하거나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을 이번 선거에 공천하기도 했다.

가장 큰 책임은 장동혁 대표에게 있다. 지난 대선 패배 후 당을 쇄신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거부했다. 혁신위 활동을 방해하고 '윤 어게인' 인사들을 중용했다.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은 징계에 회부하고 제명했다. 지난 3월에야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했지만 실질적 후속 조치는 전혀 없었다. 선거를 위해 2선 후퇴해달라는 요구도 거부했다. 공천도 원칙과 기준 없이 흔들렸다. 공천관리위원장은 두 번씩 사퇴 소동을 벌이다 본인이 출마했다. 수도권에 후보를 찾기가 어려워 사상 처음으로 경기도 시흥시장 후보 공천을 포기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다.

상당수 보수층은 이번 선거에서 국힘이 참패해야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장 대표가 패배에 책임 지고 물러날지는 알 수 없다. 국힘을 장악한 '윤 어게인' 세력도 마찬가지다. 이들이 참패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며 퇴진을 거부하면 국힘은 다시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 것이다. 이 경우 당내 의원들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데 대부분 다음 총선 공천 계산만 하며 몸을 사릴 가능성이 있다. 지금 국힘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선거를 앞두고 본지와 서울대가 공동 조사한 결과 보수층의 54%가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 이런 바람에 국힘이 부응하려면 수도권과 40~50대의 지지를 회복해야 한다. 지금의 영남, 60~70대 중심으로는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 당을 해체하는 수준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영남 기반의 당 주류들이 한 줌 기득권에 집착한다면 다음 총선에선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것이다. 야당이 바로 서지 못하면 정권은 폭주하기 마련이고 그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

「책을 보다」㉓ : 션판 『홍위병 : 잘못 태어난 마오쩌둥의 아이들』

newdaily.co.kr 뉴데일리

홍위병 광란 60주년 … 1966 중공엔 어린 홍위병, 2026 한국엔 늙은 홍위병

무엇이 다르고 같은가
한국의 정치적 광기는 5060 주도
모두 권력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선동정치

◀ 중공의 어린 홍위병들의 광기를 보라. 60년 후, 우리의 보금자리 대한민국엔 늙은 홍위병들의 광기가 분출하고 있다.

홍위병, 왜 괴물이 되었나

1966년 중국. 거리는 붉은 완장을 찬 청소년들로 뒤덮였다. 낡은 것을 파괴하고, 반혁명분자를 색출하고, 스승-부모-지식인을 끌어내 모욕했다. **『홍위병 : 잘못 태어난 마오쩌둥의 아이들』**은 그 시대를 증언한 책.

저자 **션판**은 열두 살 홍위병. ▼ 시대가 요구한 언어를 배웠고 ▼ 국가 허락 분노가 정당하다고 믿었으며 ▼ 혁명이란 이름으로 타인의 고통을 외면했다. 그러다 ***혁명이 인간을 해방한 게 아니라 괴물로 만들었음***을 깨닫는다.

문혁은 모택동이 대중을 동원, 반대자-지식인-전통문화-사회질서를 공격하도록 만든 정치술책이다. 홍위병은 ▼ ***국가가 만들어 준 언어***를 썼고 ▼ ***국가가 지정한 적***을 미워했으며 ▼ ***국가가 허락한 폭력***을 정의라고 믿었다.

1966년 중국과 2026년 한국

2026년 대한민국. ***정치적 광기는 5060 운동권에 의해 주도 된다.*** 그들의 ***정치적 상상력은 1980년대 거리-투쟁-적대-선동의 언어에 머물러*** 있다. 민주화의 기억을 도덕적 특권으로 삼고, ***다름을 반민주·개혁·역사로 낙인찍는 태도는 홍위병 사고와 닮아*** 있다.

홍위병은 미성숙했기에 선동되었고, 선동되었기에 폭력을 정의라고 믿었다. 한국의 ***《홍위병식 정치문화》*** 주도 층은 자녀에게 자유-품격-법치-관용을 가르쳐야 할 부모다. 그런데, 그들은 거친 언어로 ▼ ***기업을 적으로 만들고*** ▼ ***반대자를 악마화하고*** ▼ ***법치를 정치보복의 도구로 여기며*** ▼ ***시민사회를 진영의 병영으로 바꾸려*** 한다.

2030은 다르다. **집단주의 구호보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진영의 명령보다 상식과 공정을 요구**한다. 5060이 이념에 묶여 있을 때, 2030은 세계와 경쟁하고, 기술과 시장을 이해하며, 국가가 아니라 개인의 가능성으로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은 ***《늙은 홍위병》*** 5060 이다.

청소년 홍위병과 늙은 홍위병

문혁의 본질은 개인의 광기가 아니다. ***광기를 허가한 국가권력***이다. ***마오쩌둥***의 권력은 ▼ ***적을 지정했고*** ▼ ***분노를 조직했고*** ▼ ***폭력을 묵인***했다. 필요가 다하면 버렸다.

분노도, 정치적 갈등도 민주주의의 일부다. 그러나 국가권력이 해야 할 일은 갈등 증폭이 아니라 절제다. 특정 기업-계층-지역-세력을 겨냥한 대중적 적대감을 방조-조장한다면, **민주주의가 아니라 선동정치**다.

▼ *국가가 분노의 대상을 제공하고* ▼ *지지자들이 그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며* ▼ *권력이 미소 짓는 구조.* ***가장 위험한 국가폭력의 초기 형태***이다. 폭력은 **물리적 폭행만** 아니다. ***언어가 폭력화***되고, ***여론이 폭력화***되며, 마지막에 ***제도가 폭력화***된다. ***문혁***은 그 과정을 보여준 비극이다.

시대정신은 분노가 아니라 성숙

션판의 **책**은 오늘 한국인에게 묻는다. ▼ *국가가 정의라고 말하고* ▼ *학교가 혁명이라고 가르치며* ▼ *친구들이 모두 같은 구호를 외치고* ▼ *권력이 침묵 속에 폭력을 허락한다면, 끝까지 양심을 지킬 수 있는가.*

중국의 문혁과 한국의 오늘은 제도-역사-폭력의 수준이 다르다. 그러나, ▼ ***권력이 선동을 이용*** ▼ ***진영이 양심을 압도*** ▼ ***집단적 분노가 개인의 존엄을 짓밟는다***는 점에선 ***섬뜩하게 닮아*** 있다.

2026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거리의 광장으로 돌아가는 것도, 낡은 혁명 언어를 되살리는 것도, 특정 기업-개인-집단을 적으로 몰아세우는 것도 아니다. **성숙이다. ① 법치의 성숙 ② 시민의 성숙 ③ 국가권력의 성숙 ④ 기성세대의 성숙**이다.

2030은 원한다. **① 과거의 원한보다 미래의 기회 ② 진영의 충성보다 공정한 규칙** ③ 국가의 결정보다,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책임지는 사회.**

5060에 말해야 한다. ① 민주화의 기억이 민주주의의 면허증 아니다. ② 과거의 공로가 현재의 오만을 정당화 못한다. ③ 혁명의 언어를 붙들고 있다고 해서 정의의 편은 아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붉은 완장***이 아니다. ***완장을 채워준 권력의 손***이다. 경계해야 할 것은 ***국가권력과 결합한 선동 정치***다. ***《문혁 60주년》을 보는 대한민국이 가져야 할 역사적 교훈***이다.

도희윤 한국자유회의 사무총장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5년 6월 1일 게재 되었습니다.

NO. 204 뉴데일리 칼럼 프린트 버전 시리즈

뉴데일리 컨텐츠를 지원해주세요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